

주민 생활안정 ·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전주시,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지원

전주시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한 것은 경제위기 속에서 고용불안 등 사회적 위기가 심화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미에서다. 또한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에게는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도 담겨있다. 한 마디로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 긴급 생활안정을 위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시가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키로 한 것은 재난 발생 시에는 경제위기가 찾아오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더욱 심한 소득감소를 체험하기 때문이다. 소득감소는 삶의 질 하락을 가져오고, 소비감소와 내수위축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시가 최근 전주지역 20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출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사업체의 매출이 38~68%까지 감소했다. 전주한옥마을 상점가는 매출액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68.7% 줄었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도 60% 이상 감소했다.

나이가 경제위기로 인한 소득감소는 자살·이혼·아동 유기·가출·범죄 등의 각종 사회비리현상 증가를 초래하기도 한다. 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나 최소한의 기본권을 누리며 일시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와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시는 정부 지원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아동수당 대상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전북도 지원대상인 소상공인과는 별도로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시 생계곤란가구를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으로 정했다.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가구와 실직자 가구 등이 해당된다. 건설일용근로자 등 일용직 근로자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일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성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보합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 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매출감소로 인해 직원들에게 대환 고용유지 및 무급휴가 등을 시행하고 있다. 휴·폐업 지역업자, 프리랜서, 예술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시 실국장, 동장, 해당 과장들은 지난달 19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국인 유학생 지원 대책 회의를 갖고 현 상황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가 등 비임금근로자, 택시기사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다.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일용직이나 임시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셈이다.

시는 이러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약 5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총 250억원을 투입해 단 기간 긴급 생활안정이 가능한 5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또 지급한 금액이 지역에서 소비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할 계획이다.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경제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3개월 내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여파와 고용 불안으로 당장 생계비를 줄여야 하는 대상자들이 동네 가게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지역경제의 원활 유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경제위기에 따른 계층별 불평등과 우울감, 스트레스 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와 청년 구직자 등도 보다 경

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지원 총출력

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영세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감소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집중 편성했다.

특히 시는 영세 소상공인에 공공요금,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갑작스런 경영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대표적으로 연매출 2억원 이하인 2만2000여 사업장에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3개월 동안 20만 원씩 총 6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시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업자에게는 4대 보험료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과 월평균 215만원 미만 근로자 9192명으로, 시는 10개월 동안 1인당 10만원까지 4대 보험료 중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지원한다.

동시에 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위축된 관광산업의 겨겨가는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여행객 감소로 타격

을 입은 관광업계에 마케팅 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전북도와 함께 추진하는 3개 직접 지원사업과 더불어 간접지원 형태의 경제 활성화대책도 추진한다.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해 일시적인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약 3300여 영세 소상공인에는 1인 당 3000만원까지의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또, 2.5%의 이자도 부담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위해 1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1000여 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유도하고, 연간 2.5%의 이차보전 지원사업도 전개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재난에 가까운 경제위기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삶을 낙락으로 빠뜨리고, IMF의 경제위기 때와 같이 우리사회가 뼈아프게 겪었던 거대한 우울감에 다시 빠져들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해 일자리 위기를 넘어 생존의 위협마저 받고 있는 실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지원으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긴급 무상돌봄 서비스 제공

공동육아나눔터서 필요 아동 대상 20일까지 운영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개학이 2주간 연장됨에 따라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에서 긴급 무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자인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정유진)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돌봄을 운영키로 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

긴급 돌봄 대상은 만2세부터 초등학교 생까지 가정돌봄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돌봄 인력 책임 하에 1인당 세 명 미만의 아동을 돌봄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

를 작성해 이메일(joonju@familynet.or.kr)로 제출하면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아이돌봄 인력 4명을 확보하고 사전 소득작업을 완료했으며, 향후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2회 이상 발열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인력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과 행동요령 교육을 추진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으로 운영중인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와 어르신과 공동체를 연계한 지역사회연계 돌봄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방학 중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학기 중에도 14시부터 19시까지 정상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주시 여성가족과(063-281-5029) 또는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063-231-0185)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3대 창업 지원사업 추진

탄소융합기술원과 창업자 발굴부터 시장 안착까지 체계적 지원

전주시가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의 성장을 돕는 국가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됐다. 이에 따라 탄소와 수소 등 미래먹거리산업 분야 창업자 수의 성장을 돕는 것은 물론, 미래 전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은 올해 국비 57억원 등 총사업비 63억원을 집중 투자해 창업자 발굴부터 시장 안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3대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3대 창업 지원사업은 올해 국가 공모사업에 신규 선정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스타트업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 3개 분야에 지원한다. 이를 통해 4차 산업 분야 예비창업자를 20팀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마케팅 교육을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과 멘토링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창업자 1인당 평균 5200만원의 사업화 자금도 지원된다. 또한 시는 총 16억원이 투입되는 '2020년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사업'을 통해 예비창업자와 창업 후 3년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 등 10개 스포츠 창업 분야 팀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발굴된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기업에 창업 전반에 대한 기본교육과 함께 아이템 검증, 제품개발, 마케팅, 멘토링 등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팀당 최대 4500만원의 사업화 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전주시

전략산업인 고강도 탄소소재를 활용한 초경량 스포츠장비 등의 상품화를 도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로 2년째를 맞는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총사업비 33억원을 투입해 창업 후 3년에서 7년 사이의 창업도약기 기업들의 성과 창출을 돕고, 자금 흐름이 악화되는 시기인 데스밸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와 기술원은 이 사업을 통해 혁신 분야 기업에 최대 4억원, 일반분야 기업에 최대 2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영 전반에 대한 온·오프라인 멘토링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기업의 R&D 역량 강화 △프랑스 북핵소재 박람회(JEC World) 참가 등 복합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술원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창업 스카우터 등을 활용해 이달 말까지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34개의 창업도약기업을 발굴키로 했다.

시는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의 성장과 시장 안착을 돕는 3대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 창업자 발굴에서 육성, 성장으로 이어지는 창업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사업화 지원에 따른 자금이 지역 내에서 소비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산업계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병수 전주시 시장장은 "지역의 성장과 내실 있는 지원으로 지역의 성장장 분야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그간 다양한 창업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해온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노하우가 성공 창업을 꿈꾸는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하세요”

내달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주민센터서 접수... 코로나19로 직불금 지원 신청 늦어진 농가 위해 연장

전주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주권을 지켜내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돕기 위한 직불금 지원사업을 1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직불금 지원 신청이 늦어진 농가들을 위한 조치다. 시는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을 다

음달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지원대상 농산물은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

경농산물 일체다.

1ha당 지급단가는 논외의 경우 △유기재배 70만원 △무농약 50만원 △유기 지속지불제 35만원이며, 밭의 경우에는 △유기재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 △유기 지속지불제 70만원이다. 또 채소·특작의 경우 △유기재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 △유기 지속지불제 65만원이다.

시는 친환경농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필지별로 유기재배·무농약의 경우 3~5년간 지급하고 유기 지속지불금의 경우에는 기한 없이 지속적으로 지급하며 농가 당 지급한도 면적은 0.1~5ha다.

승방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신청기간이 연장된 만큼 대상 농업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주길 바란다"며 "친환경농업 실천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부적합으로 지급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코로나19 대응 위해 'AI 무인콜 서비스' 20일부터 본격 운영

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 재난대응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방역작업과 민원 대응 등 재난 대응부서와 지원부서들의 업무 가중을 해소하고 신속한 통계분석을 위한 'AI(인공지능) 무인콜 서비스'를 오는 2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재난상황 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글과 컴퓨터로부터 무상으로 서비스를 지원받아 추진된다.

이번 'AI 무인콜 서비스' 도입에 따라 매번 반복적인 단순한 확인사항에 대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인공지능 상담사와 관리대상이자 대화형으로 상담할 수 있게 돼 재난업무를 효율적

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간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접촉자와 의심환자, 능동감시 대상자에게 인력을 투입해 우선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또한 시는 상담 내용을 재난안전대책본부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확인결과도 즉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이와 함께 시는 국내 최초로 효율적인 재난상황을 통제하고 시민편의를 도울 수 있는 '스마트 재난관리 대응 시스템'도 오는 8월까지 구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재난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선별진료소와 마스크 등 구급 정보와 구호물품 잔량, 소득현황, 클린존,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시민에게 실시간 제공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검찰, '박근혜 옥중서신 고발건배당... 선거법 위반 검토'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으로 힘을 합쳐달라'는 내용의 옥중서신을 써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

앞서 유명하 변호사는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이 작성한 서신을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신에서 "국민 삶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도 했지만 보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특히 서신에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

을 합쳐줄 것을 호소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 18조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60조는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총선 공천에 참여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지난 5일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국경농단' 주범으로서 속죄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이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나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다룬 언론 보도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스